

# 과학기술 책임질 '정부 CTO' 임명하라

글 | 민경찬 \_ 과실연 상임대표/연세대 대학원장 kcm@yonsei.ac.kr

베이징 올림픽의 화려한 개막식은 전 세계에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 장이머우 감독은 그 동안 인간이 꿈꾸던 상상을 환상적인 현실로 바꾸어 놓았다. 개막식을 본 많은 사람들은 강력해진 중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일종의 두려움마저 느끼게 되었다. 13세기까지 세계 문명의 중심이었던 중국이 '새로운 중화(中華)'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와 '과학기술기본계획'

중국인들은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인문, 환경, 과학기술 올림픽'이라는 3가지 테마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강대국으로 올라서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중국은 8년 전부터 과학기술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올림픽을 전후해서 중국 과학기술의 발전된 모습을 세계에 과시하고자 하였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은 개막식뿐 아니라 경기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실감나게 보여주었다. 당초 미국과 종합 1위를 다툴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중국은 초반부터 금메달을 독식하면서 세계 최강의 스포츠 강국이 되었다. 물론 그 바탕에는 과학기술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올림픽에 참석하여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고 후진타오 중국 주석

은 올림픽 직후 우리 나라를 방문했다. 그러나 올림픽과 더불어 자신감에 찬 중국은 이제 우리에게 더욱 벅찬 경쟁상대가 될 것이다. '중국은 쫓아오고 일본은 앞서가는 상황에서 한국은 샌드위치 신세'라는 '샌드위치론'은 이미 지나간 얘기가 되었다. 우리 나라가 이런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과학기술 발전은 더욱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경제도 결국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최근 우리를 몹시 불안하게 했던 유가 폭등은 한국 경제를 위기 상황으로 몰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미래를 확실히 담보할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채 지구력이 떨어져 희망을 찾기 어렵다. 미래를 책임질 인재양성은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종 교육 현안에 빠져있다. 융·복합시대에 기초가 되는 수학·과학 교육은 날로 약화되고 있다. 어떻게 경쟁력의 기반인 기초·원천 기술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

앞으로 10년 후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8월 12일 대선 공약을 기반으로 앞으로 5년 간(2008~2012) 추진할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577 전략'으로 명명한 이 계획은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투자를 GDP 대비 5%로 올리고, 7대 중점기술을 개발하고 7대 시스템을 개선해 세계 7위권의 과학기술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과학기술계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첫째 '누가 과학기술 정책을 책임지느냐' 하는 문제이며, 둘째, '그 동안 크게 떨어진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어떻게 끌어올려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하느냐' 이다.

### 우려가 현실로·교육 현안에 밀린 과학기술계 이슈

현 정부는 올해 초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과학기술정책을 범부처적 차원에서 기획·조정하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해체하고 청와대 과학기술정책보좌관 자리를 없앴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에서 맡는다고 하였다. 국과위 위원장은 대통령이고 부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장관이다. 이를 실무적으로 운영위원회가 뒷받침하는데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 수석이 맡고 있다.

그런데 국과위는 1년에 겨우 3번 소집되고 교과부 장관과 교육과학기술수석에 비과학기술계의 인사가 임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거버넌스 시스템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생각이었다. 이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7월 7일 3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개각과 청와대 수석 전면 교체 후 현 정부의 내각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에는 과학기술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과학기술 특보가 임명되었지만 그 권한과 역할이 분명치 않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각 정당은 과학기술계에 비례대표를 배정하는데 인색했다. 17대 국회의 '과학기술정보위원회'에서 다루던 과학기술 관련 이슈가 이제는 대부분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하는데, 첨예한 갈등이 많은 교육 문제 때문에 과학기술 이슈는 잘 드러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떻게 정부가 주창하는 '과학기술강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지난 정부는 과학기술 부총리와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양대 축으로, 범부처적 차원에서 국가 과학기술전략을 세우고 정책들을 추진해 나갔다. 이에 비해 현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 행정을 책임질 CTO(최고과학기술책임자)가 누군지 뚜렷하지 않다. 우리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고 '경제 살리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CTO가 대통령 주위에 없는데 과학기술강국은 어

떻게 실현될 것인가.


대통령이 8월 15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 등 신성장 동력도 범부처적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 과학기술을 범부처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수석비서관을 임명하고, 국과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대통령과 과기인들의 허심탄회한 만남 시급

연초부터 과학기술계는 새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인식과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매년 대통령이 참석하던 과총 신년하례에 올해는 대통령 당선자가 보이지 않았다. 그 후 임기가 남은 과학기술 출연연구소 기관장들의 일괄사표를 받은 일과 출연연 통폐합 논란은 연구자들의 신분 불안과 연구에 몰두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과학기술인들의 의욕과 사기는 크게 떨어졌다. 사실 과학기술부 해체과정에서 생생히 보여주었던 정책 결정 그룹과 일반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오해는 과학기술계에 실망으로 다가오기도 하였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대통령이 과학기술계와 허심탄회한 만남을 통해 과학기술인들의 정서를 풀어가야 한다. 과학기술 투자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우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이 먼저 과학기술인들과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정부의 정책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감하도록 해야 과학기술인들이 신명나게 연구에 몰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바탕이 이루어질 때, 베이징 올림픽 이후 더욱 치열해질 글로벌 경쟁에서 국가의 힘을 빠르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글쓴이는 연세대학교 수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캐나다 칼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퍼지 및 지능시스템학회 회장, 대한수학회 회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겸임하고 있다.